

투데이 칼럼

코로나19 사태로 본 특례군 지정의 당위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전 세계가 혼돈에 빠졌다. ‘코로나19’ 위험이 도쿄 올림픽을 연기시키고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며 전 세계인들의 삶을 집안으로 가뒀다.

WHO(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96개국에서 총 77만 138명, 사망은 3만 6,796명(2020.3.31.(화) 오전 9시 기준)에 이른다. 코로나19는 현재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두 달여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큰 피해를 겪고 있으나 외산에서 주목하는 선진적인 방역 시스템으로 비교적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여겨진다.

장수군을 비롯한 지자체들도 빠른 대응과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으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격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범국민적 행동



장영수

장수군수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장수군은 청정지역을 유지하며 3월 31일 기준 현재까지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고령인구가 많은 장수군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수군은 방심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언제 어디에서 유입될지 모른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 활동 및 단체 행사, 모임 금지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

는 곳에서는 이 같은 준칙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확산되면서 장수군은 대응이 쉽지 않았다. 장수군의 특성에 맞춰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어야 하지만 모든 정책은 인구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해 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과 예산을 자주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없는 처지여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조치가 한계가 뒤따랐으며 피해에 대한 구제대책도 요원한 실정이다.

이 같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장수군은 어느 때보다 특례군 지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다. 재정이 열악한 군(郡)지역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유출 감소를 막기 위해서 특례군 지정이 최선이다.

재정지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의 세입은 한정돼 있지만 특수시책 추진으로 지출은 오히려 늘어 지역 경쟁력이 급속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장수군에게는 날벼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국가가 기존 지방자치법의 특례시처럼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균형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균형적 포용 성장을 위한 특례군 법제화는 필수이다.

특례군 지정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사설

코로나 팬데믹 끝끝내 극복해야

코로나 19가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

유럽의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프랑스와 독일을 반면 교사의 사례로 보아야 한다. 그 나라들은 사태가 심각하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오만한 정도로 아시아의 국가들을 깔보고 회화화하며 큰소리를 쳤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나쁜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영국은 찰스 왕세자가 확진 환자로 드러난 데 이어 존슨 총리는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소식이 다.

한국의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다. 누적 확진자의 수가 10331명에 이르러 사망자도 192명이나 되고 있는 것이다. 실시간대로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긴장의 연속이다. 신규 확진 환자도 그렇지만 사망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람자 태반이 60대 이상이나 일 반 노인들은 보통 이상의 경제계를 보여야겠다.

이런 때는 정부와 보건 당국의 권고대로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또다시 말하거나 전복도와 보건 당국은 꾸준히 잘 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잘 하고 있다.

도내에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6 명으로 집계된 이후 새로운 환자 발생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광역 지자체와 비교해 우리 전북은 청정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퇴 치될 때까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코로나를 상대로 하는 전쟁은 보건 당국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일반 시민들도 할 일이 있다. 보건 당국이 요구하는 대로 하자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은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것은 개인주의에 바탕한 제멋대로의 행동이 가장 큰 원인이다.

코로나 극복에는 연대 정신이 큰 힘을 발휘한다.

당국의 요구대로 손을 의식적으로 자주 씻고, 마스크를 끼고 외출하기와 2미터 이상의 거리두기를 날마다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19를 가릴코 극복해야 겠다

군산형 일자리 추진 속도를 내야

군산형 일자리에 속도감이 없다. 며칠전에도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 말했거나 지금은 군산형 일자리에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

실직자들을 포함해 군산시민들은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들다.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 살리기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야겠다.

이제 오래 전의 일이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 지역을 위해 상생형 일자리를 내겠다며 모델 투자 계획이며 추진 방향을 알리는 설명회를 군산시청에서 가졌는데 그때도 발빠른 행보라고 보기가 어려웠다.

대통령 직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과 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방향을 논의하고 격려했지만 그것으로 한숨 돌릴 수 있겠다고 믿는 군산 시민은 별로 없었다. 지난날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조기 지원 약속이 있었지만 그게 뚜렷한 대책이라고 믿는 이도 별로 없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

리 추진 행보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오래 전에 한국GM공장을 인수한 주식회사 명신이 2천5백55억 원을 투입해 643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겠노라는 투자협약식을 가졌던 게 다시 생각난다.

협약 당사자인 전북도와 군산시의 고위 관계자들은 협약식의 자리에서 웃는 낯으로 주목을 불끈 쥐고 사진을 찍은 만큼 이제 강단 있게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고 지역 경기가 회복되게 하려면 일의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시 강조해 당부하거나 군산을 살리내기 위해 더욱더 힘내야 겠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날 군산 경제가 쓰러질 때 발만 동동 거렸을 뿐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제 것처럼 무력해서는 안 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재류 찾기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앞으로 군산이 전기차 생산의 중심지가 되게 하려면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금부터라도 속도 감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

기고문

힘내라 대한민국,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모처럼의 휴일 아침, 6살 딸아이의 갑작스러운 경련에 경은함은 깨졌다.

‘119로 전화를 할까? ‘내 차로 빨리 병원예? 아냐, 일단 119 지도의 사에게 의료상담을 받아보자!’ 불안해하는 아이 엄마와 달리 2급 응급구조사 소방대원인 나는 딸아이의 상태를 살폈고, 긴박한 출동 중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평소 모습과는 다르게 119 의료상담 목소리엔 두서없는 다급함이 앞섰다.

얼마 후 다행스럽게도 딸아이는 얼마 품에서 안정을 되찾았고 한동안 깊은 잠을 자던 아이는 오후 1시쯤 깨어 또다시 경련을 시작했다. 두 번째 경련에 정신을 잃은 아이를 보는 순간 아침부터 유지해온 내 침착함은 더이상 찾을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엔 온통 119구급차를 이

용해 빨리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야 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응급이송된 아이는 1주간 입원 후 건강하게 퇴원했다.

소방대원과 가족들은 구급대원들의 수고를 알기에 정말 응급상황이 아니라고서는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구급대원으로서 위급한 응급환자를 마주하여 처치와 함께 신속한 이송으로 한 생명을 지켜냈다는 뿌듯함은 온몸의 피곤을 잊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지만, 단순 비응급 출동에서의 허탈감은 구급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비응급환자 이송은 한해 5만 3천여 건에 이른다.

비응급 구급출동 억제를 위해 119 종합상황실 신고접수부터 환자상태를 꼼꼼히 진단하고 있지만, 전화만 으로 비응급 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정찬오

순창소방서 방호구조과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병원까지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단순 감기·치통환자 ▲주취자 ▲단순 열상·찰과상·타박상환자 등은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동 법률 제30조에는 위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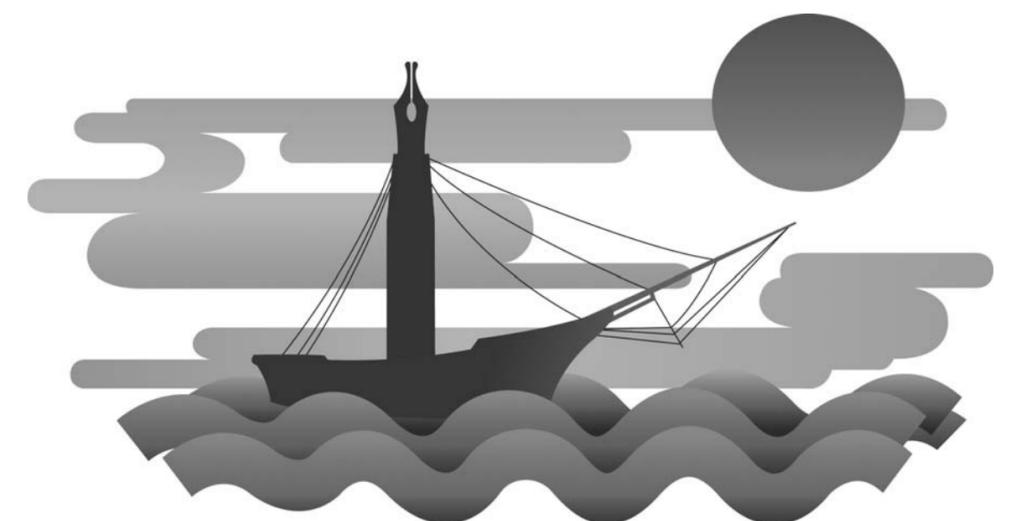
황의 거짓신고,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를 이용하였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월 1일 국가직화된 구급대원들은 반낮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와 유증상자를 가장 먼저 접촉·이송하며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주기를 당부한다. 이는 119구급차를 꼭 필요로 하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작은 배려이다.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관계부처의 모든 분들에게 파이팅을 외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